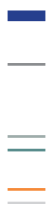


재정패널 소식지

2023년

National Survey of Tax and Benefit

한 국 조 세 재 정 연 구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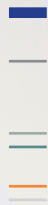
National Survey of
Tax and Benefit

재정패널 소식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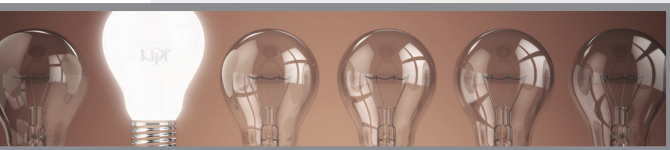
2023년

한 국 조 세 재 정 연 구 원

www.kipf.re.kr/panel/



National Survey of
Tax and Benefit



재정패널 2023년 소식지

재정패널 조사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2008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전국단위의 조사로 우리나라 가계의 재정·조세·복지 현황 등을 파악하고, 관련 정부 정책의 효과 검증을 위해 설계된 패널조사입니다.

Contents

재정패널 소개	04
15차년도 기준 표본별 조사 결과	05
자료 이용안내	06
15차년도 부가조사 안내	07
2023년 재정패널 학술대회 발표 논문	17
2023년 재정패널 활용 연구	35

재정패널 소개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 조세·재정·공공기관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조사·분석함으로써 국가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출연 연구기관

■ 재정패널 조사란?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2008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전국단위의 종단조사
- 조세 및 재정 정책의 효과 검증, 가계 조세부담 및 복지수혜 현황 파악을 목적으로 설계
- 2023년 현재 16차년도 현장 조사 완료

■ 조사 대상

- 전국 15개 시·도에서 추출된 5,634가구 및 2021년 신규 추출한 4,555가구

■ 조사 영역

- 납세 및 복지, 지출 및 소득, 자산 및 부채, 경제활동상태, 소득공제내역, 사회 인식

■ 조사 특징

- 1) 납세자의 소득신고서류 수집을 통한 자료 생성
 - 근로소득자와 종합소득자의 소득신고서류 수집
 - 항목별 소득공제액 또는 세액공제액, 결정세액 정보 제공
- 2) 안정적으로 패널을 유지하며 매년 높은 조사 성공률 보유
- 3) 개인의 사회 및 납세제도에 대한 인식조사 수행

■ 표본 종류

- 1차 원표본: 1차년도에 추출한 원표본 5,014가구
- 14차 통합표본: 14차년도 조사에 성공한 8,798가구(1차 원표본 3,480가구+2차 대체추출 468가구+분가가구 815가구+14차 추출 신규 원표본 4,035가구)

15차년도 기준 표본별 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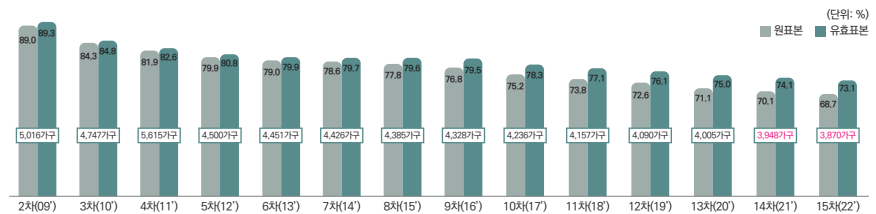
재정패널
소식지

1차 원표본

▶ 15차년도 기준 조사 성공률

- 원표본(1차 원표본 및 2차 대체표본) 기준 성공률: 68.7%
- 유효 원표본* 기준 성공률: 73.1%

* 기준 원표본 가구 중 조사가 불가능한 가구(사망, 해외이민 등)를 제외한 나머지를 대상으로 산출한 조사 성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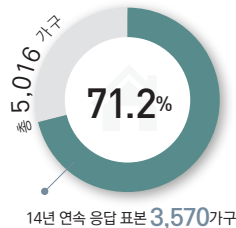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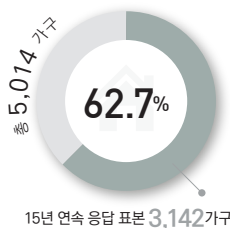


연속 조사 성공률

▶ 15차년도 기준, 15년 연속 응답 표본 가구에 종단가중치가 부여되어 있음 (14차년도는 14년 연속 응답 표본 가구)

▶ 1차 원표본 기준 14년 연속 응답 표본: 3,142가구

※ 2차 대체표본까지 포함한 5,016가구를 기준으로 할 때 13년 연속 응답 표본 가구는 총 3,638가구이나 이들 가구는 종단가중치 부여 대상에서는 제외됨



신규 원표본

▶ 15차년도 기준 조사 성공률

- 원표본(14차 원표본 및 15차 대체표본) 기준 성공률: 88.7%
- 유효 원표본 기준 성공률: 88.6%

자료 이용안내

재정패널 공식자료

- ▶ 제공 범위: 1~14차 데이터, 기초분석보고서, 테크니컬 리포트
- ▶ 제공 방식: 공식 홈페이지 및 KOSIS를 통한 주요 결과 공개
- ▶ 2023년 12월 22일 15차 재정패널 데이터 공개 예정

자료 다운로드

- ▶ 공식 홈페이지의 '데이터' 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 <https://www.kipf.re.kr/panel/>
- ▶ 간단한 연구 관련 정보 입력 후 자료 및 보고서 다운로드 가능

SMART NaSTaB

- ▶ 데이터 가공용 STATA 프로그램
 - 재정패널자료의 가공시간을 단축시키고, 오류 없는 데이터를 추출하기 위해 구축함
- ▶ 프로그램에서 활용 가능한 가공
 - 연도별, 가구별, 가구원별 데이터 병합
 - 소득 및 지출 등 생성 변수 추출
- ▶ SMART NaSTaB 다운로드
 - 재정패널 홈페이지 ▶ 공지사항 ▶ SMART NaSTaB_ver2(다운로드)
- ▶ 특이사항
 - STATA 13.0 버전 이상에서 구동 가능
 - 대화창 및 명령구문을 통해 활용 가능



15차년도 부가조사 안내

재정패널
소식지

재정패널조사의 부가조사 영역은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안에 대해 한시적으로 조사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15차년도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 소득, 근무형태의 변화에 대해 조사하였다. 15차년도 부가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코로나19 정책 평가

1) 거리두기 정책 평가

코로나19 거리두기 정책이 적절했다('매우 적절' 8.2% + '약간 적절' 55.6%)고 응답한 비율이 63.8%였고, 코로나19 예방 효과에 효과적('매우 효과적' 10.2% + '약간 효과적' 50.5%)이라는 응답은 60.7%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한 비율이 53.5%였다.

〈표 1〉 코로나19 거리두기 정책 평가

(base: 가구원 의식조사 응답자 14,529명)

구분	항목	비중(%)
거리두기 정책 평가	매우 적절	8.2
	약간 적절	55.6
	보통이다	28.6
	약간 부적절	7.1
	매우 부적절	0.6
거리두기 정책 코로나19 예방 효과	매우 효과적	10.2
	약간 효과적	50.5
	보통이다	30.9
	약간 비효과적	7.3
	매우 비효과적	1.1
거리두기 정책 차별화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	40.2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	53.5
	잘 모르겠다	6.2
	기타	0.1

15차년도 부가조사 안내

2) 경제 지원 정책 평가

코로나19 경제 지원 정책이 적절했다('매우 적절' 6.7% + '약간 적절' 48.5%)고 응답한 비율이 55.2%였고, 경제 지원 정책을 선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응답이 57.3%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정부 지원 정책이 적절했다('매우 적절' 4.5% + '약간 적절' 50.1%)는 응답이 54.6%였다.

〈표 2〉 코로나19 경제 지원 정책 평가

(base: 가구원 의식조사 응답자 14,529명)

구분	항목	비중(%)
경제 지원 정책 평가	매우 적절	6.7
	약간 적절	48.5
	보통이다	31.8
	약간 부적절	11.5
	매우 부적절	1.5
경제 지원 정책 방향	보편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42.7
	선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57.3
경제 지원 포함 전반적인 정책 평가	매우 적절	4.5
	약간 적절	50.1
	보통이다	35.2
경제 지원 포함 전반적인 정책 평가	약간 부적절	9.3
	매우 부적절	0.8

주된 일자리 변화

코로나19 확산 전과 비교하여 주된 일자리가 변화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73.3%로 가장 높았고, 다른 일자리에서 일하고 있다는 5.2%였다. 이 중 스스로 원해서 일자리를 바꿨다는 응답이 72.9%로 나타났다. 주된 일자리 변화가 코로나19 확산과 관련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5.4%였다.

〈표 3〉 주된 일자리 변화

(base: 가구원 의식조사 응답자 14,529명)

구분	항목	비중(%)
주된 일자리 변화	동일한 일자리에서 일하고 있다	73.3
	다른 일자리에서 일하고 있다	5.2
	일을 하고 있지 않다	3.1
	2020년 3월에 일을 하고 있지 않았다	18.3

〈표 4〉 주된 일자리 변화 과정 및 이유

(base: 〈표 3〉 '다른 일자리에서 일하고 있다' + '아니다, 일을 하고 있지 않다' 응답자 1,048명)

구분	항목	비중(%)
주된 일자리 변경 과정	계속 다니고 싶었으나 직장의 요구 혹은 어쩔 수 없이	27.1
	스스로 원해서	72.9
주된 일자리 변경의 가장 큰 이유	직장의 파산, 폐업, 휴업 등으로 인해	11.2
	정리하고 및 권고사직	2.1
	명예퇴직 및 정년퇴직	6.4
	계약기간이 끝나서	8.1
	소득 또는 보수가 적어서	12.6
	일거리가 없거나 적어서	9.7
	일이 임시적이거나 장래성이 없어서	5.4
	적성, 지식, 기능 등이 맞지 않아서	5.7
	근로시간 또는 근로환경이 나빠서	5.5
	자기(가족) 사업을 하려고	2.6
	결혼, 출산, 육아, 가족간병 등 가사 문제로	4.0
	건강, 고령 등의 이유로	15.6
	좀 더 좋은 일자리가 있어서	8.2
	기타	2.9
주된 일자리 변경과 코로나19 관련 여부	관련 있다	25.4
	관련 없다	74.6

15차년도 부가조사 안내

■ 주된 일자리 근무방식 변화

주된 일자리 근무방식에 변화가 있다는 응답 비율이 5.5%로 나타났다. 변화된 근무방식을 적용한 적 있다는 응답은 80.9%였다. 근무방식 중 재택근무를 했다는 응답이 73.5%로 가장 높았다. 근무방식 적용 후 업무 처리량, 업무 스트레스, 업무 만족도에 대한 변화 정도를 물어보는 질문에 약 50%가 '보통이다'라고 응답하였다.

〈표 5〉 주된 일자리 근무방식 변화

(base: 가구원 의식조사 응답자 14,529명)

구분	항목	비중(%)
주된 일자리 근무방식 변화	변화 있다	5.5
	변화 없다	94.5

〈표 6〉 주된 일자리 근무방식 변화

(base: 〈표 5〉 '변화 있다' 응답자 538명)

구분	항목	비중(%)
변화된 근무방식 적용 여부	적용한 적 있다	80.9
	적용한 적 없다	19.1

〈표 7〉 근무방식 적용 유무 및 비중

(base: 〈표 6〉 '적용한 적 있다' 응답자 423명)

항목	적용 유무(%)		적용일 비중(평균, %)	적용 예정 유무(%)	
	예	아니오		예	아니오
단시간 근로	예	18.2	37.2	예	9.9
	아니오	81.8		아니오	88.8
				적용 불가	1.4
시차출퇴근	예	11.4	36.0	예	42.0
	아니오	88.6		아니오	55.9
				적용 불가	2.2

〈표 7〉의 계속

항목	적용 유무(%)		적용일 비중(평균, %)	적용 예정 유무(%)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집중근무시간제	예	5.3	29.7	예	81.6
	아니오	94.7		아니오	18.4
				적용 불가	0.0
선택근무	예	7.3	41.8	예	23.3
	아니오	92.7		아니오	76.7
				적용 불가	0.0
재택근무	예	73.5	25.4	예	26.6
	아니오	26.5		아니오	62.6
				적용 불가	10.8
원격근무	예	8.6	32.1	예	28.3
	아니오	91.4		아니오	58.7
				적용 불가	13.0
기타	예	0.9	54.8	예	0.0
	아니오	99.1		아니오	63.4
				적용 불가	36.6

〈표 8〉 근무방식 적용 후 변화

(base: 〈표 6〉 '적용한 적 있다' 응답자 423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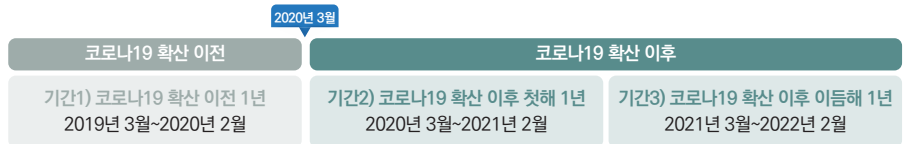
구분	항목	비중(%)
근무방식 적용 후 업무 처리량 증감	매우 증가	1.9
	약간 증가	21.3
	보통이다	56.4
	약간 감소	17.5
	매우 감소	2.9
근무방식 적용 후 업무 스트레스 증감	매우 증가	3.5
	약간 증가	19.8

15차년도 부가조사 안내

〈표 8〉의 계속

구분	항목	비중(%)
근무방식 적용 후 업무 스트레스 증감	보통이다	48.3
	약간 감소	25.7
	매우 감소	2.6
근무방식 적용 후 업무 만족도 변화	매우 만족	3.5
	약간 만족	31.1
	보통이다	49.5
	약간 불만족	14.0
	매우 불만족	2.0

코로나19 확산 이후 소득 및 일자리 변화



코로나19 확산 이전 시점과 이후 시점을 구분하여 연간 총 소득을 조사하였을 때, 2020년 3월~2021년 2월의 총 소득은 코로나19 확산 이전 시점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21년 3월~2022년 2월의 총 소득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기간별 연간 총 소득

(base: 가구원 의식조사 응답자 14,529명)

항목	소득금액(평균, 만원)
2019년 3월 ~ 2020년 2월 총 소득	2,970.8
2020년 3월 ~ 2021년 2월 총 소득	2,947.1
2021년 3월 ~ 2022년 2월 총 소득	3,051.3

1) 2019년 대비 2020년 소득 변화

코로나19 확산 이전 시점(2019년)과 비교하여 2020년 소득이 변화했다는 응답은 36.2%('소득 감소' 11.5% + '소득 증가' 24.7%)였으며 코로나19 때문에 변화했다는 응답이 25.9%였다. 소득 감소 회복을 위한 조치는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이 78.3%로 가장 높았다.

〈표 10〉 2019년 대비 2020년 소득 변화

(base: 가구원 의식조사 응답자 14,529명)

구분	항목	비중(%)
2019년과 2020년 소득 변화	소득 감소	11.5
	소득 증가	24.7
	변화 없음	63.9

〈표 11〉 2020년 소득 변화와 코로나19 관련 여부

(base: 〈표 10〉 '소득 감소' + '소득 증가' 응답자 5,018명)

구분	항목	비중(%)
소득 변화와 코로나19 관련 여부	주로 코로나19 때문에 변화	25.9
	코로나19 관련 없이 변화	74.1

〈표 12〉 2020년 소득 감소 회복을 위한 조치

(base: 〈표 10〉 '소득 감소' 응답자 1,643명)

구분	항목	비중(%)
2020년 소득 감소 회복 위한 조치 (중복응답)	금융자산 인출 및 처분	12.5
	부동산 자산 처분	0.7
	타 가구원(친인척 등)으로부터 무상 지원	2.8
	금융기관 대출, 개인 부채 등	5.0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	78.3
	기타	0.8

15차년도 부가조사 안내

2) 2019년 대비 2021년 변화

코로나19 확산 이전 시점(2019년)과 비교하여 2021년 소득이 변화했다는 응답은 42.0%('소득 감소' 12.2% + '소득 증가' 29.8%)였으며 코로나19 때문에 변화했다는 응답이 21.0%였다. 소득 감소 회복을 위한 조치는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이 82.4%로 가장 높았다.

〈표 13〉 2019년 대비 2021년 소득 변화

(base: 가구원 의식조사 응답자 14,529명)

구분	항목	비중(%)
2019년과 2021년 소득 변화	소득 감소	12.2
	소득 증가	29.8
	변화 없음	58.0

〈표 14〉 2021년 소득 변화와 코로나19 관련 여부

(base: 〈표 13〉 '소득 감소' + '소득 증가' 응답자 5,898명)

구분	항목	비중(%)
소득 변화와 코로나19 관련 여부	주로 코로나19 때문에 변화	21.0
	코로나19 관련 없이 변화	79.0

〈표 15〉 2021년 소득 감소 회복을 위한 조치

(base: 〈표 13〉 '소득 감소' 응답자 1,710명)

구분	항목	비중(%)
2021년 소득 감소 회복 위한 조치 (중복응답)	금융자산 인출 및 처분	10.9
	부동산 자산 처분	0.7
	타 가구원(친인척 등)으로부터 무상 지원	1.4
	금융기관 대출, 개인 부채 등	3.8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	82.4
	기타	0.9

3) 코로나19 확산 이후 추가 일자리 구직 경험

코로나19 확산 이후 추가 일자리를 구직하기 위해 경험했다는 응답은 1.5%('구직활동하여 추가

일자리 구한 경험 있다' 0.6% + '구직활동했지만 추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경험 있다' 0.9%)로 그 비중이 크지 않았다. 추가 일자리 구직활동을 했던 사람들의 구직활동 원인은 '주된 일자리의 수입이 감소'하였다는 응답이 43.6%로 가장 높았다.

〈표 16〉 코로나19 확산 이후 추가 일자리 확보 위한 구직활동 경험

(base: 가구원 의식조사 응답자 14,529명)

구분	항목	비중(%)
추가 일자리 확보 구직활동 경험	구직활동하여 추가 일자리 구한 경험 있다	0.6
	구직활동을 했지만 추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경험 있다	0.9
	구직활동하지 않았다	98.4

〈표 17〉 추가 일자리 구직활동 원인 및 코로나19 관련 여부

(base: 〈표 16〉 '구직활동하여 추가 일자리 구한 경험 있다' + '구직활동했지만 추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경험 있다' 응답자 194명)

구분	항목	비중(%)
추가 일자리 확보 구직활동 원인	주된 일자리의 수입이 감소하여	43.6
	주된 일자리의 노동시간이 감소하여	6.0
	새로운 소득을 창출할 수 있을 것 같아서	28.9
	자기발전 또는 장래를 위하여	17.7
	기타	3.8
추가 구직활동 코로나19 확산 관련 여부	예	46.2
	아니오	53.8

〈표 18〉 추가 일자리 총소득 및 추가 일자리 개수

(base: 〈표 16〉 '구직활동하여 추가 일자리 구한 경험 있다' 응답자 8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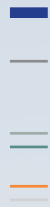
항목	소득금액(평균, 만원)	추가 일자리 개수(평균, 개)
2020년 3월 ~ 2021년 2월 총 소득	1,511.6	0.8
2021년 3월 ~ 2022년 2월 총 소득	1,478.3	1.3

* 15차년도 재정패널조사는 2023년 12월 22일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 상기 기초통계 값은 데이터 보완 및 정제과정을 통해 일부 수정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12월 공개예정인 '15차년도 기초분석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www.kipf.re.kr/panel/



National Survey of
Tax and Benefit





2023년

재정패널
학술대회 발표 논문

» I-1

사회에 대한 인식과 교육비 지출 관계 분석

김혜자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본 연구는 최근 5년간 유·초·중·고 자녀를 둔 가구주(부모)의 사회에 대한 인식이 자녀의 교육비 지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초점을 두고 분석하였다. 재정패널조사 11~15차 데이터를 이용해 20세 이하 자녀 가구원을 추출하고 가구주 정보와의 매칭을 통해 자녀 패널자료를 생성했다. 먼저 2018~2022년의 사교육비, 계층 간 소득 격차에 대한 인식, 위험회피 성향, 사회·정치 신뢰를 비교하였다. 2018년 대비 2019~2022년 모든 학교급에서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액은 증가했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로 명명되는 2019~2021년 기간 소폭 감소하였다가 2021년 이후 다시 회복되는 양상을 보였다. 특히 유치원과 초등학교 자녀의 사교육비 지출액 규모의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사회계층 간 소득 격차에 대한 인식은 유·초·중·고 모두에서 1점(매우 크다)대를 보였고, 가구소득에 따른 차별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는 가구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계층 간 소득 격차에 대한 부정적 태도와 인식이 사회 전반에서 공유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위험회피 성향은 유·초·중·고 모두 7점대를 보여 수익성 대비 안정성을 지향하는 결과를 보였다. 특히 초등학교와 중학교 자녀를 둔 가구주(부모)일 때 지난 5년간 위험회피 성향의 변화가 0.05 수준에서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다. 소득분위에 따라 시점별 학교급에 따른 위험회피 성향의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사회 및 정치에 대한 신뢰는 보통에서 대체로 신뢰할 수 없는 정도의 가운데인 3점 초·중반대로 부정적 방향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정치 신뢰수준은 학교급 및 시점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게 확인되지 않았고, 소득분위에 따라서도 시점별 학교급 간 평균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가구주(부모)의 사회적 인식과 태도가 자녀의 사교육비 지출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계층 간 소득 격차에 대한 가구주(부모)의 인식이 부정적일수록 자녀의 사교육비 지출은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계층 간 소득 격차 완화에 대해 정부의 정책적 노력 대비 개인의 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수록 자녀의 사교육비 지출은 낮아지는 결과를 보였다. 즉, 정부의 역할에 대한 기대 혹은 신뢰는 사교육비 지출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정치인과 공무원 그리고 언론인에 대한 신뢰가 부정적일수록, 법조인과 전문가집단에 대한 신뢰가 긍정적 방향으로 높아질수록 사교육비 지출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에 기초해 사회에 대한 인식 및 태도와 자녀 교육비 지출의 관계를 논의하였다.

» 1-2

가구의 예상 공적연금소득이 자녀의 사교육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

서영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원

송헌재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본 연구는 재정패널의 2014년부터 2021년 자료를 이용하여 가구의 예상 공적연금소득이 자녀의 사교육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하였다. 종속변수인 사교육비 지출액의 특성을 반영하고자 패널 토빗 모형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공적연금의 예상 수령액은 사교육비 지출에 양(+)의 방향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녀의 사교육비 지출을 미래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로 인식하여 나타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또는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을 하는 가구의 소비행태가 반영된 결과일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고령화 사회에서 노후의 경제적 안정을 달성하고자 공적연금의 소득대체를 조정에 대한 방향을 논의하는 데에 시사점을 제공한다. 또한 자녀의 사교육비 지출이 가계의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인적 자본의 질적 증대와 경제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정책의 설계와 추진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 I-3

재정패널자료를 활용한 기부 분야별 기부행위 결정요인 탐색

주익현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객원연구원

본 연구는 기부 분야별로 개인의 기부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요인이 무엇인지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제공하는 재정패널조사 1~15차 원자료를 확보하였다. 기부금액에 대해서는 패널고정효과모형, 기부행위 여부에 대해서는 반복사건사 분석방법 중 하나인 PWP Counting Process 모형을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알 수 있었다. 첫째, 모든 기부 분야에서 기부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개인소득뿐이었다. 둘째, 종교는 종교 분야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분야에 대해서 기부를 하도록 만드는 효과가 있었지만 그 외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가 없거나 부정적인 효과가 있었다. 셋째, 개인소득은 기부금액에 대해서는 종교 분야를 제외하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가 없었다. 이는 기부행위를 이해하고 설명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경제적 특성 외 다른 요인들을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II-1

조세구조와 복지정책에 관한 선호가 코로나19 경제지원정책 만족도에 미친 영향

강민조 동덕여자대학교 세무회계학과 조교수

본 연구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지원정책 만족도와 조세 및 복지 제도에 대한 납세자들의 주관적 선호의 연계성을 밝힘으로써 정책당국의 경제지원정책 개선에 기여하고, 바람직한 조세구조 및 복지정책 설계에 활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조세구조에 관한 선호를 조세부담률과 조세누진성으로, 복지정책에 관한 선호를 복지체제와 복지증세로 구분하여 코로나19 지원금의 필요성 및 지원금액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에 미친 주요 요인을 탐색하였다. 특히, 재정패널 데이터는 제공하는 고유한 연구 기회를 활용하여 적정 조세부담률 및 적정 누진성에 대한 납세자들의 선호체계를 표준화된 지표로 측정하였다.

분석 결과 누진적 조세체계를 선호할수록 코로나19 경제지원정책의 필요성을 강하게 긍정하였지만, 지원금액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아울러 선별적인 복지정책을 강하게 지지할수록 소상공인 지원금액뿐만 아니라 전 국민 재난지원금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발견함으로써 복지정책의 방향에 대한 선호가 지원금액의 평가에 미치는 차별적 영향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전반적인 코로나19에 대응한 정부의 단기적 경제지원 정책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가 조세제도 및 복지정책에 대한 납세자들의 장기적 선호체계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암시한다.

본 연구는 조세누진성에 대한 선호 및 복지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선호가 코로나19 지원금의 필요성 및 지원금액의 적절성 평가에 미치는 상관관계를 실증적으로 밝혔다는 점에서 학술적 공헌점을 가진다. 또한,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정부의 재정지원 정책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조세구조 및 복지정책에 대한 사회적 선호와 연관하여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한편, 사회적 신뢰는 보편적 또는 선별적 지원방식과 무관하게 지원금의 필요성과 지원금액의 적절성 전반에 걸쳐 일관되게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정책지지와 사회적 신뢰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체계적인 이론의 정립을 위한 다양한 후속 연구가 기대된다.

»II-2

조세제도를 이용한 긴급재난지원금의 선별적 지원방식의 분석

전병욱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제1차 재난지원금의 당초 지원 대상은 지원 형평성·재원여건 등을 감안하여 소득하위 70% 가구였는데, 이와 같은 선별적 지원방식에 대한 지원 대상의 타당성 및 문턱효과의 비판과 함께 대규모의 행정비용으로 인한 비효율성의 문제점이 제기되었고, 이러한 측면을 반영하여 최종적으로는 전 국민에게 동(同)지원금이 지급되었다.

이러한 시행상의 논란을 고려하면 긴급한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시키기 위해 장래에 재난지원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할 경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지원방식을 채택하면서 보완적 방식으로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많은 혜택을 얻을 수 있는 합리적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재난지원금을 과세 대상 소득으로 규정하여 누진세율에 따라 소득세를 부담하게 하면 추가적인 행정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소득세를 제외한 재난지원금의 순액을 경제적 능력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보편적 지원방식의 문제점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소득세의 과세를 전제로 한 재난지원금의 보편적 지원방식과 관련하여 이를 조세법령에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한 과세체계의 다양한 개편방안과 함께 개별 방안의 시행에 따른 세수효과와 소득계층별 부담수준 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위해 먼저, 지원 단위는 재난지원금의 전액을 가구주의 소득으로 구분하는 방안(방안㉔), 과세 대상 소득이 있는 가구원들에게 균등하게 배분하는 방안(방안㉕) 및 성년 가구원에게 균등하게 배분하는 방안(방안㉖)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소득의 종류는

개별 수령자가 근로자 또는 개인사업자인지의 여부에 따라 근로·사업·기타소득(방안①) 및 근로·기타소득으로(방안②) 구분하는 방안과 함께 전액을 기타소득(방안③) 및 배당소득으로(방안④) 구분하는 방안을 채택하였다. 이와 함께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의제·추계필요경비를 인정하는 경우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와 별도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제1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부담세액 비율은 대부분 개별 과세방안과 무관하게 가구의 소득수준이 증가할수록 높아져서 재난지원금의 순액을 경제적 능력에 따라 차등해서 지급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또한, 부담세액 비율을 통해 확인한 정부의 세수효과는 개별 과세방안에 따라 5.5~14.0%로 나타났는데, 재난지원금의 전액을 가구주의 기타소득으로 구분하는 가장 단순한 경우의 세수효과(11.3%)는 제1차 재난지원금 중에서 당초 지원 대상이 아닌 상위 30%의 가구에 대한 지급비율(22.1%)의 절반 수준으로 나타났다. 즉, 보편적 지원방식의 제1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할 경우에는 당초의 선별적 지원방안에 비해서는 재정절감액이 절반 수준이지만, 지원 대상의 선정에 위한 행정비용을 절감하는 것과 함께 임의적 기준의 적용에 의한 사회적 갈등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까지 고려하면 장래의 재난지원금 지급 시 현행 과세체계에 따라 소득세를 부담하는 것을 대안적 시행방안으로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것이다.

»II-3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방식을 이용한 가구의 소비지출 결정모형에 대한 실증분석

김채현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부 석사수로

송헌재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본 연구는 재정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긴급재난지원금을 대표로 수령한 세대주의 성별이 가구의 품목별 소비지출의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추정하였다. 가구의 의사결정 과정에 가구원의 협상력이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설명하기 위해 집합모형(Collective Model)을 이용하였다. 분석 결과, 긴급재난지원금을 여성 배우자가 수령한 경우 전체 분석대상 가구와 가구주의 나이가 50세 이상인 가구에서의 연간 소비지출 금액은 감소하였으며, 가구주의 나이가 50세 미만인 가구에서의 저축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 소비지출 금액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전체 분석 대상 가구에서 지출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한 경우 가구주의 나이에 따라 분석 대상을 나누어 살펴보았을 때 가구주가 은퇴한 이후의 가구에서 지출규모가 더 크게 나타났음을 확인하였다. 이 결과는 여성이 대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으면 지출을 줄이려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III-1

재정패널자료로 본 개인연금제도 개선 필요성

이호선 부산가톨릭대학교 경영학과 부교수

본 연구에서는 납세 관련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재정패널자료를 활용하여 개인연금제도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으며 어떤 문제를 노출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어떻게 개선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 논한다. 15차 재정패널 자료들을 기초로 근로소득이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들을 소득구간 별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낮은 근로소득 구간에는 상용직보다 임시직과 일용직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소득자가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재정패널에서 관찰되는 개인연금 가입자 비율이 상당히 낮으며,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는 점을 볼 수 있었다. 연금저축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통계와 비교할 때 불일치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사항이라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다만 연금저축을 포함한 개인연금 전반에 대한 통계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며 이러한 통계의 구축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개인연금과 관련하여 재정패널의 설문도 보다 명확하게 수정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특히 연금보험항목의 경우 연금저축보험과 혼동되어 기록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며, 세액공제 문항에서는 세액공제액이 아닌 납입액으로 응답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인연금제도가 노후소득보장체계의 한 축을 구성하는 중요 제도임에도 그에 대한 검토와 개선 노력은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세액공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저소득층의 개인연금제도 선택유인이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보이는 것이나, 재정패널 분석상 개인연금 가입자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상황, 그리고 현 연금 수령 계약의 경우 평균 수령액이 300만원 정도에 불과한 점 등 제도 개선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향후 이러한 제도 개선 과제들을 도출하고 어떻게 제도 개선을 하여 실질적인 노후소득보장이 가능하도록 할 것인가가 중요한 사안이 되어야 할 것이다.

»III-2

가구주 근로 여건 및 가구 자산구성 차이가 노후 준비에 미치는 영향분석

이순국 제주연구원 부연구위원

김경아 한국노동연구원 초빙연구위원

본 연구는 재정패널조사 10~14차(2018~2022년)를 활용하여 가구주의 근로여건과 가구 자산구성 차이에 따른 노후 준비 영향을 분석하였다. 즉 가구의 노후 준비 여부, 사적 노후 준비 수준(금액), 연령별 노후 준비 격차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연령이 높을수록 미취학자녀가 많을수록 공적연금 가입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반면, 교육수준이 높고 임금근로자 상용직일수록 긍정적 효과를 보인다. 그리고 남성가구주이며, 수도권에 거주할수록 사적 노후 준비에는 부정적이거나, 지방에 거주할수록 긍정적인 효과로 나타난다. 또한, 상용직일수록 미취학자녀가 많을수록 사적 노후 준비 수준은 증가하며, 특히 금융자산을 갖고 있을수록 노후 준비 수준에 미치는 효과는 긍정적이다.

한편, 연령별 노후 준비 격차에서는 연령이 증가하면서 연금가입 의존도가 떨어지고, 지방에 거주할수록 사적 노후 준비가 증가한다. 은퇴 전 연령층(50~60세)은 금융자산이 노후 준비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은퇴 후 연령층(61~70세)은 상용직일수록 사적 노후 준비에 긍정적 효과를 보여 근로여건의 안정성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연령별, 고용형태별 고령자들의 노후 준비를 위한 차별적인 연금정책 설계가 필요하며, 취약계층 고령자를 중심으로 일자리에서 계속고용, 자산의 현금유동성을 높이는 정책적 지원들이 요청된다.

»III-3

**연령, 기간, 코호트에 따른 한국사회 가계부채의 변화 추이
- 재정패널 자료를 이용한 종단연구 -****박호준**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박사수로**박정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 사회 가계부채의 연령, 기간, 코호트에 따른 변화 추이를 분석하는 데에 있다. 분석을 위한 자료로는 재정패널 제1~15차 데이터(2007~2021년)를 사용하였으며, 표본은 총 70,794건이었다. 분석방법으로는 APC 분석(age-period-cohort analysis)을 사용하였으며, '일반화 가법 회귀모형'(generalized additive regression model)을 적용하여 연령, 기간, 코호트 효과를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가계부채에 있어서 소득수준에 따라서 다른 연령, 기간, 코호트 효과가 확인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연령, 기간, 코호트 효과는 삶의 질의 객관적인 조건(고용지위, 혼인지위, 자가 여부) 등에 따라서 달라졌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가계부채 문제를 접근함에 있어서 기간에 따른 변화뿐만 아니라 연령과 코호트 효과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가계부채는 삶의 질의 객관적 조건에 따라서 동일 연령대 혹은 동일 코호트 내에서도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IV-1

납세자의 조세 공정성 인식에 대한 잠재프로파일 분류 및 영향요인 분석

이경호 한국인문사회총연합회 연구교수

본 연구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수행한 재정패널조사 15차 데이터를 활용하여 조세 공정성 인식과 하위 집단 간의 관련성을 분석했다. 연구는 심리학적 이론을 기반으로 수직적 공정성, 수평적 공정성, 교환 형평성의 차원을 분석하고, 잠재프로파일분석(LPA)을 통해 납세자들의 조세 공정성 프로파일을 식별했다. 분석 결과, 3개의 잠재집단이 가장 적합하다는 결과가 나왔으나, 최소 비율 집단의 문제로 인해 2개의 의미 있는 하위 집단을 도출했다. 연구 결과는 여러 하위 집단이 조세 공정성에 대해 다른 인식을 가지며, 이는 연령, 혼인상태, 최종학력, 학력, 연간 총소득과 연관이 있음을 밝혀냈다. 또한 조세 공정성 인식은 조세정책과 개인 순응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연구는 조세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인 인구통계학적 및 사회경제적 요인들이 조세 공정성 인식 형성 과정에서 상호작용하며 하위 잠재집단의 분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연구는 결측치 등 2차 데이터의 한계로 인해 다양한 하위 지표를 모델에 포함시키지 못하였으며, 변수 정의나 분류의 차이로 인해 조세 공정성의 모든 측면을 전체적으로 포착하지 못한 한계를 보였다. 본 연구는 잠재 납세자 집단을 파악하여 조세정책에 맞는 접근방식을 제안하고, 커뮤니케이션 전략 및 거버넌스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연구 결과는 조세 공정성을 포함한 다양한 관점이 조세정책과 사회적 결속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며, 조세 시스템을 더욱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IV-2

재산과세의 분포 특성과 재분배 효과

성명재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본 연구는 재정패널자료(2013~2021년 귀속분)를 이용하여 자산분배구조의 분포 특성과 자산 관련 보유세 부담의 누진도 및 재분배 효과를 분석하였다. 우리나라 재산세는 누진세율 체계를 채택하고 있다. 이는 누진과세를 통해 양(+의 재분배 효과를 도모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관료와 정치인들은 재산세 누진과세를 통해 양(+의 재분배 효과를 실현할 수 있다고 믿는 경향이 있다. 대부분의 일반인들도 그렇게 믿고 있다. 2010년대 말 정부에서 부동산가격 안정화를 위한 주요 정책수단 중 하나로 재산과세를 강화하면서, 소득재분배 또는 부(자산)의 재분배 기능이 강화될 것을 기대하였던 것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실증분석을 통해 재산과세의 재분배 효과를 검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소득과 자산, 소득과 재산세 사이에 정(+의 상관관계가 있지만, 강도(즉, 자산·재산세의 소득탄력성)는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저소득층일수록 자산·재산세 비중이 소득비중보다 크고, 고소득층일수록 자산·재산세 비중이 소득비중보다 작기 때문에 자산·재산세는 소득에 대해 비탄력적인 분포 특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자산계층별 재산세 분포도 대부분의 자산계층에서 비탄력적인 분포 특성을 나타낸 것으로 추정되었다. 세전·세후 지니계수의 변화율(하락률)로 측정한 재산과세의 소득재분배 효과는 0~-0.18%, 총자산 기준의 자산재분배 효과는 -1.06~+0.84%로 추정되었다. 특히, 코로나19가 발생하였던 2020~2021년에는 자산재분배 효과가 일관되게 음(-)의 효과를 나타내었다. 전체적으로는 소득재분배 효과의 절대크기가 0에 가깝기 때문에 재산과세가 소득분배구조와 자산분배구조에 미친 영향은 사실상 거의 0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미미한 것으로 추정된다. 재산과세의 재분배 효과가 미미하거나 음(-)의 재분배 효과를 나타내는

이유는, 소득과 자산 사이의 상관관계가 상당히 느슨하다는 점, 총자산 중 재산세(종합부동산세 포함)가 과세되지 않는 (금융)자산이 전체의 10% 정도로 작지 않다는 점, 자산계층별로 자산구성(portfolio)이 비대칭적이라는 점, 재산세가 누진세율체계를 지녔지만 합산과세되지 않고 물건별로 별도 과세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 등으로 인해 재산과세의 누진도와 재분배 효과가 미약한 원인으로 추정된다.

»Ⅳ-3

위험선호는 자산을 증대시키는가?

김대환 동아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선행연구는 위험회피성향에 따라 경제주체의 자산운용에 대한 의사결정도 달라진다는 결론을 제시해 왔으나, 그러한 의사결정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분석하지는 못했다. 본 연구는 균형패널자료(2017~2022년 재정패널조사)를 활용해 각 개인의 위험선호도에 따른 미래 자산의 변화를 분석하고 다음과 같은 결과를 확인했다. 첫째, 위험선호도가 높을수록 자산이 증가했다. 둘째, 위험선호도에 따른 자산 증가는 총 자산, 그리고 부동산 자산 및 금융자산 모두에서 일관되게 관측되었다. 셋째, 자산의 변화는 주로 부동산자산에 의해 결정된다. 넷째, 위험선호도가 높은 사람들의 자산 증가는 단기, 중기, 장기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관측되었으며, 특히 장기로 갈수록 자산이 더 많이 증가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위험을 어느 정도 감수하고 투자에 적극적인 사람이 평균적으로 더 많은 자산을 축적할 수 있다는 결론을 제시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선호도에 따른 미래 자산의 증감효과는 본 연구가 최초이기 때문에 향후 추가 연구를 통해 더욱 깊이 있는 시사점 도출이 요구된다.

»IV-4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가 주관적 건강상태에 미친 영향

박명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부교수

본 연구의 목적은 2020년 발발한 코로나19 팬데믹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주관적 건강상태에 미친 영향을 재정패널자료(제9~15차)를 이용하여 실증분석하였다. 이중차분모형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가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한 긍정 비율에 미치는 평균 처리효과(ATE)를 추정한 결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소득이 감소한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주관적 건강상태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할 비율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약 8%p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는 우리나라 국민의 주관적인 건강상태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고 실제 건강에서 부정적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더 나아가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적 상황이 소득하락을 야기하는 경우, 이러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 소득지원 정책은 개인들의 건강상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나타낸다.



2023년

재정패널 활용 연구

최근 1년간 발표된 재정패널 활용 연구 목록입니다.

[학위논문]

제목	저자	비고
조세정책의 영향에 관한 세 가지 실증연구	김병남	(박사):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제학과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시행이 체육활동비와 신체활동에 미치는 영향	박세윤	(석사):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스포츠인터랙션사이언스학과
사플리값 분해를 이용한 자산의 형성요인별 분해 분석	배지현	(석사):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제학과
1인 가구 특성이 주택점유에 미치는 영향	심종섭	(박사): 상명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가구 에너지지출과 기업 탄소배출의 불평등 분석 연구	이정미	(박사):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제학과
APC 효과에 기반한 자가용 분석: 베이지안 비선형 모형	조성은	(석사): 한양대학교 일반대학원 도시공학과
난방용 연료의 소비 특성 및 탄소세 도입 시 파급효과 분석	최한영	(석사):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제학과

* 최근 1년간 재정패널을 활용한 학위논문들의 목록입니다.

[학술지논문]

제목	저자	비고
Effects of tax benefits on the price elasticity of charitable contributions in South Korea	김영록	Pacific Economic Review, 28(2), 206~217.
연금계좌 세액공제 적격납입액 추가 한도가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에 미치는 효과	김도형 전병욱	사회보장연구, 39(1), 43~60.
The Impact of Changing Political Positions on Charitable Donations: A Case Study of a Political Scandal in South Korea	김영록 정호용	Review of Socionetwork Strategies, 1~10.
근로장려세제의 순비용 추정	송헌재 전병힐	재정학연구, 16(3), 1~29.
공적연금과 개인연금의 보유유형에 대한 연구	윤성주 이상엽	사회보장연구, 39(2), 59~86.
세액공제 한도가 연금계좌 투자에 미치는 영향과 소득구간별 차이	이경배 이준상	재정학연구, 16(3), 31~56.
고령자 고용형태별 자산수준이 소비에 미치는 효과 분석	이순국 전용일	응용경제, 25(2), 25~53.
학부모의 정부신뢰가 사교육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 분석: 정치적 이념에 따른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이안나 이태호	교육정치학연구, 30(1), 125~153.
정치적 이념과 소득수준이 납세자의 교환 공정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영한 이혜영	회계학연구, 48(4), 1~36.
조세적·비조세적 요인이 이전지출 및 증여에 미친 영향	전병욱	세무학연구, 40(1), 123~154.
베이지안 비선형 모형에 기반한 자가율 분석	조성은 원혜진 이창무	부동산연구, 33(3), 59~79.
난방용 연료의 소비 특성 및 탄소세 도입 시 가구 파급효과: 일반등유를 중심으로	최한영 이동규	에너지경제연구, 22(1), 403~427.
주택 보유세 관련 제도개편의 소득분배효과 : 2020~2022년 개정안을 중심으로	허등용	지방행정연구, 37(1), 71~96.

* 최근 1년간 학술지에 게재된 재정패널 활용 연구들의 목록입니다.



한 국 조 세 재 정 연 구 원

발 행 일 : 2023. 12. 10.

발행기관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재정전망센터

주 소 :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반곡동)

배포문의 : panel@kipf.re.kr, 044-414-2473/2411

홈페이지 : www.kipf.re.kr/panel/